

복원 옛전남도청 새이름은? … ‘5.18·국립·최후항쟁’ 담아야

“최후항쟁” “민중항쟁” “민주·인권” “역사관”

5·18 최후항쟁지이자 복원이 진행되는 옛 전남도청의 명칭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는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가 주최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가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 운영 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건물 명칭으로는 옛 전남도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5·18’과 국가기관을 주제로 하는 ‘국립’을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

부수적으로 민주, 역사, 정의, 항쟁, 치유 등의 키워드를 추가해 6가지 명칭을 제시했다. 명칭은 ▲국립 5·18민주(역사)기념관 ▲국립 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주)항쟁전시관 ▲국립5·18(민주)평화전당 ▲국립 5·18(민주)항쟁기록관 ▲국립5·18항쟁기념관 등이다.

건물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가운데 효율·책무·공공·전문성을 고려, 문체부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토론은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1부 복원 건물 명칭 토론회에서는 건물에 ‘최후항쟁’, ‘민중항쟁’, ‘민주·인권’의 키워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열흘 간 항쟁을 살려 ‘최후항쟁’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호 복원대책위원회 실장은 “차별성 없는 기록·역사관 대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오월 정신과 최후 항쟁지의 역사성을 담은 ‘국립5·18최후항쟁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대학원 교수는 “5·18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아 민주·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다목적강당에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가 주최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 명칭과 운영방안 논의 5·18과 국립 핵심단어 선정… 문체부 운영 적정 열흘간 항쟁 역사 살려야 vs 보편적 의미 담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발맞춰 조직 구성”

인권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중립적 의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에 1980년의 아픔과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옛전남도청’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성 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5·18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한국근현대사 등 중립적인 의미를 담은 ‘국립 전남도

청 역사박물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부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과 연결성을 고려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 복원대책위 상황실장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도청이 함께 위치해 문화와 역사가 부딪칠 수 있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5·18과 역사가 빠져있는데 이를 개정해 전당과 복원 조직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전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 역사관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수법인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공휴 5·18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오월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체부 소속 특수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27일 시민군이 진압 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선 최후항전지다. 도청은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원형이 훼손돼 복원이 진행됐다.

복원 사업은 13만9506㎡일대 6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시관은 시설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개관 예정이다.

/오권철 기자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나주시세지면 대산리 돈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철거된다. 사진=나주시제공

나주시, 세지면 대산 주민 숙원 ‘축산 악취 해소’ 물꼬 텃다 “50억 투입해 대규모 돈사 철거로 정주여건 개선”

전남 나주시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산 악취 민원 해소의 물꼬를 텃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세지면 대산리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무엇보다 세지면 대산리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대규모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대산리구 내 대산리에는 시설이 노후화된 대규모 돈사 7동(2266.5㎡)이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돈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소재한 용산마을 등 3개 마을과 세지면 소재지까지 약 2km 거리에 걸쳐 악

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돈사 7동을 포함해 총 8278㎡(약 2505평)의 부지를 매입해 시설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 후 부지에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자연 생태복원 기간을 거친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내 난개발 요소인 축사, 폐가, 공장 등을 철거 후 부지를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정주 환경 회복을 핵심 목적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2022년 노안면 금암마을, 2023년 문평면 오륜마을, 2024년 봉황면 죽석마을에 이어 2025년 세지면 대산리구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2심 감형, 징역 7년6개월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도피하려 한 만큼 양형 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은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씨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동동 한 도로(제한속도 시속 50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추산) 수치의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시속 128km로 초고속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원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67시간여 만인 9월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김씨와 오씨는 검거됐다.

김씨가 뒀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뉴시스

광주 풍영정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하천 관리 주체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2021년 6월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전 징검다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다.

두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천 초등생 익사사고’ 광주시-광산구 유족 손해책임 공방 유족 제기 손해소에서 광주시 1·2심 모두 패소 4억여 원 배상지급하자 광산구에 구상금 청구

났고 1·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유족들에게 3억3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올해 3월 변론 없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관리 주체와 그에 따른 배상 책

임에 대해 다툼을 쟁점이 더 있어 전날부터 다시 심리가 재개됐다.

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서의 하천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3일 열린다.

한편, 유족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풍영정전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된

만큼 시가 익사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책임 비율을 60%로 봤다.

이어진 2심에서도 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관리 소홀도 상당하다고 보고 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줄였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